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Dominique Strauss-Kahn

IMF가 대전에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아시아21(Asia21)’이라고 명명된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의 여러 정부대표와 연구기관, NGO들이 참석하였다. 내 견해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IMF와 아시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기초 작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솔직히 12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나쁜 기억 때문에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에 IMF는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나쁜 기억과 감정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분명히 반성을 하고 관계 재설정을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아시아경제가 다시 부상하였으며, 아시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시아21’ 회의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너댓가지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시아경제의 회복 양상에 관한 것인데, 아시아는 사실상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IMF의 견해로는 회복세가 상당히 강력하고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새로운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지난 주 홍콩에서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상당히 강세이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회복의 속도가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 브라질, 칠레, 페루 등 남미국가들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고, 아프리카도 특히 과거의 경제위기들과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과 아프리카경제의 회복 간에는 통상 1년의 시차가 있었는데 그 시차가 사라진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을 보면, 비록 소득수준은 낮지만 5~6%의 회복속도를 보임으로써, 아프리카대륙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불확실하다. IMF는 성장률이 3%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알기 어렵다. IMF의 전망은 다른 전망치들의 평균보다는 낙관적이며,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강하여 금년 말이면 드

* 이 글은 2010년 7월 13일 개최된 ‘IGE/Prudential 국제금융특강’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디어 실업률도 감소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세계경제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국가들에게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들의 성장률이 1~1.5%에 머무를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이는 또한 유럽국가들이 당분간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회복의 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도 모든 국가가 같을 수는 없다. 처음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 간에 거의 동일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맞먹을 정도로 심각했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각국은 거의 IMF가 권고한 경제부양책들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부양책은 전 세계가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명백히 다른 게임이다. 금년도 평균성장률이 7%인 아시아와 1~1.5%인 유럽의 출구전략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지난 토론토 G20회의가 약간 혼선을 빚었던 이유이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가 있었는데, 어떤 국가들은 부양책의 지속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출구전략과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등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각국들이 서로 다른 현실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상이한 의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경제정책의 조율이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각국이 채택한 경제정책을 다른 나라와 협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국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회복 기조는 취약한데 그것은 하강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더블딥(double dip)침체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더블딥이 오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기본 시나리오는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단기간에 또 다른 위기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한다. IMF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지만 그러한 위험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큰 위험이 존재한다.

하나는 일부 국가들의 재정상황에 대한 위험이다. 말할 나위 없이 즉각 떠오르는 사례가 그리스이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오늘도 IMF의 협조 하에 EU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대책이 수립되었고, 나로서는 다른 유럽국가가 그리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위험은 신흥시장국가들과 관련이 있다. 세계경제에는 아직도 많은 유동성이 존재하고 동시에 위험감수성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성장이 빠른 신흥시장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신흥시장국으로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이 자본이 외국인직접투자(FDI)면 환영할 만 하지만 단기투자라면 문제가 많다. 따라서 자산거품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경제정책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자본유입을 이들 국가가 어떻게 잘 관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IMF로서는 이러한 위험이 경제위기로 현실화될 것으로 믿지 않지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경제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의 하나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국내적인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된 해법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의 저(低)성장으로부터 아시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유럽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따라서 어느 나라도 뒷짐을 지고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면서 자국과 이웃 나라들의 경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국가들은 세계화된 경제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매우 주목할 만한 사항은 경제위기 중에 보여준 아시아경제의 강인성(resilience)이다. 아시아 은행들은 대부분 서브프라임 류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이 서브프라임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아시아경제는 전 세계적 경제하강으로부터 타격을 받았다. 금번 금융위기에 아시아의 금융산업이 잘 버티어 낸 이유는 지난 아시아 경제 위기 시 금융산업을 잘 정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었고, 대가를 덜 치루고도 금융산업을 정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아무튼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국과 여러 아시아국가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아시아의 은행들은 별 문제없이 이번 금융위기를 순항하였고 경제회복에 필요한 금융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의 결론이다. 세계경제가 아직 숲 속에서 완전히 빠져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의 정점은 지나왔다. 어느 나라를 검토해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도 문제들이 있지만, 아시아경제가 강인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아시아가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아시아국가들의 지속적인 회복은 면밀히 점검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금번 경기회복은 수출에만 의존

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사고는 아시아국가들이 수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수요약화로 앞으로 수출을 적게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2의 성장엔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들, 특히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에서 국내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경제모델로의 전환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사고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소규모 국가에게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국내시장에 초점을 맞출 수 없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는 중국 같은 나라가 국내경제에 주력하기 위하여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외부세계에 개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즉, 세계에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국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출규모가 클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수출주도형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점화(點火)해야 하는데, 아시아국가들 간 역내무역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아시아가 최종소비지가 되는 상품들을 늘려야 한다. 지금의 아시아국가들 간 무역을 보면 최종소비가 아시아 밖인 제품들의 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중국 같은 국가는 소비가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아시아국가들에게는 민간투자자와 공공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검토대상이다. 즉,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전략이 짜여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두 가지 경고사항이 있다.

이 두 가지 경고사항은 불균등과 관련된 것인데, 즉 국가 간 불균등과 국가 내 불균등의 문제이다. 아시아에는 저소득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저소득 국가가 어떻게 신흥국가의 지위로 전환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지도 않고 우연히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옛날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전환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동반자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시아국가들이 다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져도 국가 내의 불균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시아에는 아직도 빈곤층의 비중이 높으며, 동반성장의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 아시아 4용(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고(高)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동반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지난 10~15년간 성장모델이 바뀌었다. 중국도 불균등을 줄이는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아시아가 앞으로 오는 10년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순조롭게 달성하려면 두 가지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 포인트로 가보겠다.

경제위기 이전에 이룩한 성장과 경제위기 이후의 높은 성장률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역할은 달라졌다. 아시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경제위기 동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G20에 아시아지역에서 6개국이 포함됨으로써 아시아의 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물론 한국이 금년 G20 의장국이긴 하지만 G20가 전부는 아니다. G20이 중요한 회의체이고 공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G20에서는 한국의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다소 손쉬워질 것이다. 신흥국가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그 책임이 막중하며 지금까지 한국은 잘 해왔다. 내 견해로는 한국 당국이 제시한 의제도 매우 적절한 것이다.

아시아의 역할은 중요하다. 최악의 위기상황을 넘긴 지금의 G20 핵심활동 중 하나는 어떻게 공조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 동안에 실천된 공조는 위기극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으며, 위기 이후에도 과연 이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지가 주요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G20은 이른바 상호평가프로그램(MAP: Mutual Assessment Program) 제도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구축의 책임이 IMF에게 부여되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이 제시한 개별국가의 경제전망이 하나로 취합되며, 이러한 각국별 전망을 합해서 볼 때 과연 일관성 있는 세계경제 그림에 부합하는지가 검토된다. 만약 그 그림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IMF는 시작단계에서부터 불일치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토론토 회의에서 IMF는 G20 국가들의 협조적 조치로 향후 5년간 2.5%의 성장률을 추가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3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4천만이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난 토론토 G20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지지한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면 IMF가 국가별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들을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G20 국가들의 경제정책이 잘 조정이 된다면,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아시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아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내가 언급한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 포인트는 아시아국가들과 IMF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이다. 금년 위기기간 중에 IMF의 역할 비중이 확실히 커졌는데, IMF에서 아시아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발언권을 높이고 IMF와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것이 아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는 IMF의 이익에도 부합하는데, 아시아와의 직접적인 교섭 없이는 IMF가 세계

경제를 관장하는 다국적기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IMF와 아시아국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구시대의 악폐를 치워버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재무장관이었던 1998년에 홍콩에서 개최된 IMF총회가 생각난다. 당시,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방안의 꼬끼리와 같은 거북스런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 구상했던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이 그것이다. 나는 젊은 장관으로서 어떤 사안이 걸린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IMF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아시아통화기금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배격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IMF만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늘 그러하듯이 어떤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AMF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가 나온 것이다.

IMF가 AMF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나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지역협정은 반가운 일이며, 지역협력체가 만들어지면 IMF가 이들과 협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IMF가 혼자서 다루는 것을 꺼려하던 그리스 문제를 EU와 협력한 사례가 이러한 관점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처음에 EU는 IMF와의 공조를 꺼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EU가 조직화되고 경제가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사태를 EU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EU는 IMF의 자금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IMF의 전문성 및 경험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결국 EU는 유럽금융안정자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과 IMF 간 협업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도달하였다. 마찬가지로 CMI와 IMF의 협력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며, 또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계 다른 지역, 즉 라틴아메리카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흔쾌히 그들과도 협력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통화협력기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구시대의 문제로써 사라져야 하고 또 사라지고 있다. 지금도 현안 문제가 충분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한가한 문제들을 의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현재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른바 아시아국가들의 지분(quota invoice)문제인데, 이는 IMF에서 아시아국가들의 대표성과 관련이 있다.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2009년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의하면, IMF는 2011년 1월까지 선진국에서 역동적인 신흥시장국가로, 또한 과도한 대표성을 가진 국가들에서 과소대표를 가진 국가들로 5%의 투표권을 이양하도록 약속하였다. 나는 G20 의장국인 한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 11월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완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이는 엄청난 성과가 될 것이다. 5%의 투표권 이양은 특정 국가들의 투표권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투표권을 늘려달라는 국가들은 많지만, 줄이겠다는 나라들은 매우 적다. 이것이 100%로 맞아떨어져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IMF의 직원 및 경영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지분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IMF 이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사회에 이사가 24명인데 비정상적인 모습이 제거되도록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일부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보다 대표성이 약한데 이는 매우 비정상이다. 개편이 이루어지면 24명 이사 중 12명은 12대 경제대국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국가들의 몫이 증가되고 아시아국가들의 IMF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나는 IMF가 아시아에게 제2의 자기집(second home)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편안하게 느끼려면 방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방을 충분히 제공하려면 어떤 국가들, 특히 유럽국가들이 아시아국가들이나 브라질 등의 국가에게 투표권의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21'회의의 성과물이라 내가 일컫는 것의 일부이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3개항은 앞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이다.

첫째는, IMF의 분석이 보다 유용해져야 하고 아시아국가들에게 더욱 손쉽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이라 함은 IMF가 최근 구축하고 있는 일종의 조기경보체제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어떻게 파급되는가 하는 분석도 포함된다. 또한 IMF는 보다 공평한 분석을 내놓는데 주력해야 한다. 신흥시장국가들은 IMF가 선진국가들을 분석할 때 자신들보다 덜 신랄하게 다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의 노조들이 거리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아시아국가들 간에 IMF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IMF의 지원활동(outreach)을 증가시켜야 하며, 또 IMF가 기술원조, 위기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회원국들에게 봉사하고 있음은 물론 회원국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국 당국이 제안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이다. 이는 IMF가 지금의 세계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더욱 적합하도록 자금지원체제를 최신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위기기간 중에 변동신용라인(FCL)을 도입했는데 매우 유용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 FCL 이외에, 건실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형태의 체계적 위험에 피해를 볼 수 있는 40~50개 국가들에 잘 맞는 예방적 신용공급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한국 당국자들과 장시간 논의한 바 있지만, IMF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다자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IMF와 협상하는 국가에는 오명(stigma)이 따라 붙는 현실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중요한 아이디어이다. 어떤 나라가 IMF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체계적 위험이 닥쳐올 때, 같은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합동으로 IMF에 접근해서 공동으로 어떤 안전조치를 요구한다면, 한 나라가 낙인 찍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건에 관하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완결되지 못하였다. IMF 이사회에서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G20 서울회의 시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마지막 과제는 IMF의 지분배분과 관련된 것인데 이미 얘기했으므로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다.

이상의 세가지 과제가 이번 대전회의에서 도출해 낸 사안들이며, IMF도 앞으로 계속 다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제시된 사항이 모두 달성되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꼭 달성되어야겠지만, 지금부터 1년 후에는 IMF와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는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정상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1/3 가까이를 점유하는 아시아는 IMF에서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고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시아의 지도력은 G20에서 한국의 의장국 이후에도 발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에게 G20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2010년 이후에도 세상은 지속된다. 따라서 앞으로 3~4년 내에 세계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3~4년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충분할 것이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로 EU에 대한 IMF의 전략적인 포지션은 어떤 것인가? 특히 최근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른바 PIGS 국가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입장은? IMF는 EU를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는가 또는 국가별로 다루는가? 둘째로 과거 한국과 IMF 간의 경험이 PIGS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가? 한국의 경우처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이 나라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답변 먼저 PIGS란 말보다는 반드시 GIPS라는 약어를 써주시기 바란다. GIPS가 이들 나라를 지칭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약어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IMF의 회원권은 개별 국가들로 구성되며 EU는 IMF회원이 아니다. 내가 은행가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지만, IMF는 상업적 은행이 아니다. 따라서 요청이 있을 때만 그 국가를 지원할 뿐이다. 그리스의 경우도 그러했고 도움을 원하는 어느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과거의 경험은 분명히 유용하다. IMF의 지원을 받을 때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IMF가 어떤 나라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 개혁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은 IMF와 정부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시에는 IMF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제를 고치려 시도하였다. 바퀴에 고장이 나서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지고 가면 정비사가 바퀴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당신은 정비공이 엔진, 조향장치, 창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한꺼번에 모두 고칠 돈이 없다. 따라서 국가들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고치려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IMF가 각국이 가진 모든 문제를 고치려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IMF는 당장 절대적으로 고쳐야 할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대부분이 아시아금융위기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다. 그렇지만 IMF는 역시 IMF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는 어떤 국가와도 협상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내 견해로는 그리스의 프로그램은 잘 조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가혹하지 않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잣대나 판단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질문 신흥시장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적 안전망을 설립하려 할 가능성이 있나? 만약 그렇다면 IMF는 이러한 지역적 안전망을 지지할 것 인가?

답변 어느 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보수적인 요소가 우세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너무 앞서가는 데서 생기는 과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하다. 안전망에 대하여 IMF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미 있는 안전망의 운용과정을 개선하는데 있다.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만약 결과가 안 나온다면 지역차원에서의 해법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에서 나는 지역협정에 대한 호의적 입장을 언급한 바 있고, 지역협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협정이 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EU가 좋은 사례이다. 아시아에는 EU와 비슷한 것이 없다. EU가 통합을 이루는 데는 40년이 걸렸으며, 그러한 지역적 체제임에도 그리스문제를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세계경제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지역협정만으로서 충분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IMF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해낸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최선의 해법은 협력이다. 보완적인 기구를 가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질문 IMF가 한 곳에만 있으면서, 국가들이 찾아와 노크를 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세계 여러 곳에 IMF를 두면 IMF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IMF가 세계경제에 보다 더 잘 접합될 수 있으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발견해 낼 수 있고, 조정도 더 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답변 위기대처에 있어서 각국이 요청하기 전에는 IMF가 어느 나라에도 개입할 수는 없다. 물론 매일매일 IMF는 행동지향적이 되려고 노력한다.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을 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핵심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는데, IMF는 위기 시에만 헤드라인에 등장하고 평상시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IMF 자원의 절반은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라든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에 투입되

고 있다. 따라서 IMF가 각국이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경리담당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워싱턴 D.C.에만 본부를 두는 것은 이상적이지는 않으며 지역본부를 둔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IMF 설립협정에는 IMF의 최대지분을 가진 국가의 영토 내에 본부를 둔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가 프랑스의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EU를 하나의 의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싸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면 EU가 최대지분국가가 되고 IMF본부는 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는 IMF가 회원국들과 직접 교류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히 IMF가 현장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한다면 좋겠지만, 비용문제와 전략적 문제가 있다.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제약이 있다. 경제위지만 피할 수 있고, 위기를 주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회피하는데 따른 이익이 더 크다면, 예산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어렵다. IMF로서는 공평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관성을 유지하자면 직원들이 본부에서 협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다른 점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IMF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이 회의를 해야 하는 관계로 IMF를 분산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IMF는 집중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정부와 IMF 파견관 간에 협력을 잘하고 있고 정부당국은 흔쾌히 IMF 파견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토의하고 있다. 그래서 IMF는 현장에 더 많이 주재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질문 자본통제와 토빈세(Tobin Tax)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이 사안에 대하여 나는 매우 실용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대규모 자본유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크게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해답은 화폐가 절상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국가는 특정한 시점에서 통화 가치가 적정수준에 있으며 더 이상의 절상은 수출을 저해하고 수익하지 못하다고 믿을 수 있다. 그 나라는 두 번째 방어선으로 옮겨가서, 보유고를 쌓고 불태화정책(sterilize)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정

책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다. 그 문제는 결국 통화정책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방어선은 건전성기준을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정책수단이 소진되고 나면 더 많은 자본유입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각국이 실용적(pragmatic)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통제는 유용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본통제가,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본유입으로 경제를 교란하고 경제정책을 망칠 수 있는 단기적인 경우에는, 자본통제도 이념적 이유에서 배격할 수만은 없는 실용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8개월 전 브라질이 자본통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IMF의 의견을 물어왔다. 나는 브라질 정부에게 자본통제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효과적이 아니라는 견해를 얘기해주었다. 브라질은 일종의 토빈세인 자본통제를 도입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매우 단기간의 효험이 있었을 뿐이다. 내가 실용적 견해를 가졌다는 사례로 제시해 보았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있다면,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단점의 비용이 더 적다면, 그 정책은 도입되어야 한다. 반대로 단점의 비용이 이점보다 크다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실용적인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류의 정책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지속적인 자본유입이 발생한다면 구조적인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